

“위안부 합의, 日정부에 재협상은 요구 안할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처리 방향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일본 출연금 10억엔, 우리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며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9일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지만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 처리 방향과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 ▲위안부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 모색 ▲생존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 ▲그러나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음

한 보편적 인권문제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역사의 교훈이자 여성 인권 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다"면서 "이울러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한·일간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정부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정부의 처리 방향과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면서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진정한 문제 해결 될 수 없지만 양국간 공식 합의 사실 부인 못해”
“日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따라 진실 인정·피해자 위해 노력 기대”

표에서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다만 일본 측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된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 보고서'에 따른 정부의 기본적

것 ▲과거사 문제의 지혜로운 해결과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노력 병행 등이다. 강 장관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분들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해왔다"고 운을 떼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 한·일 양자차원을 넘어 전시(戰時) 여성 성폭력에 관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 과거사 문제와 발전적 협력은 분리해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발표 마지막 메시지에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공동미래창조 전문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남경필 “바른정당 탈당계 제출...한국당 복당 아직”

“유승민, 이후 큰 통합의 길서 다시 만났으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회의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바른정당 의원 총회에서 탈당사를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현 소속인 바른정당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과의 통합 대열 불참을 밝힌 끝에 탈당을 결심한 것이다. 남 지사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참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대표 등을 만나 말씀드렸고 오늘 탈당계를 제출할 것 같다"며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남 지사는 "오늘 그간 함께 했

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여러 의원들에게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이 잘 되길 희망하는 말씀을 드렸다"며 "또 이후에 큰 통합의 길에서 다시 만났으면 한다. 서로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겠고"고 설명했다. 그는 탈당 이유에 대해 "보수통합 후 중도통합 이런 길로 가자고

했었는데 순서가 달라져 저는 동참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남 지사는 다만 자유한국당 복당 여부에 관해선 "아직 시점 등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남 지사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공천을 포기하면 복당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건 것에 대해 "일단 제가(복당) 결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느 정당이든 공당은 공당으로서의 절차에 따라 후보들을 정하게 돼있다.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게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남 지사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빠른 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바른정당 내 탈당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학재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과 함께 행보보하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지난해 11월 김무성 의원 등 9명의 집단탈당으로 의석수가 20석에서 11석으로 줄어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 이날 김세연 의원이 탈당해 한국당으로 복당함에 따라 이학재 의원까지 탈당하게 되면 의석수는 9석으로 줄게 된다.

통합반대와 최경환 “큰 사고 나기 전에 통합버스 시동꺼야”



국민의당 조배숙(가운데)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킴이운동본부 의원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경환, 정병완, 정동영, 조배숙, 천정배, 유성엽, 박주현 의원.

통합 반대파도인 국민의당지킴이 운동본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최근 통합 추진 과정을 버스에 비유하며 "큰 사고 나기 전에 시동을 꺼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

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대표의 처지가 곤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정작 통합버스에 시동을 걸었지만 약속한 동승 파트너는 울타탈 결심을 못하고 있다"며

"내가 가는 곳이 가이할 길이라 약속하고 아니면 타던 버스 계속 타고 가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비유했다. 그는 또 "오늘 두 분이 탑승을 거절했다 또 다른 탑승 거절자도 대기하고 있다. 시너지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며 "시동을 건 통합버스는 속도가 나지 않는다. 핸들을 잡은 손은 좌우 방향을 잃고 액셀을 밟고 있는 다리는 말을 듣지 않는다. 엔진은 공회전, 타이어도 말썽을 부린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승객들이 동요한다. 빨간 신호등은 왜 이리 많은지 연료는 바닥이 나고 기름이 새고 있었다. 뚝뚝하고 나신 사람들이 기사를 바꾸라고 한다. 난감하다"며 "멈추기에는 너무 끌고 왔다. 그래도 멈춰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